

신재생에너지 사업 놓고 '엷히고 설킨 갈등'

개발 중단 vs 사업 허가 대립 속 주민-사업자-지자체 간 소송전·민원 불통 어정쩡한 행정에 주민 의견 나뉘며 마을 양분...지자체 대상 불복소송도 전남 매년 민원 100여건 달해...합리적 합의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 필요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전남지역 시·군에는 마을 경관과 산림을 훼손한다며 태양광 개발을 중단해달라는 주민들 민원과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허가를 내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복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신재생 사업자들도 주민 합의 및 발전기금 기부 등을 내세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자체에 반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리한 소송전에 나서는 형편이다. 지자체도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는 커녕, 분쟁에 엮이지 않으려고 마을·주민·업체에 떠맡겨버리면서 마을이 양분되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정쩡한 눈치보기? 분쟁 해결 못해 법원으로 =광주지법과 고법 행정 재판부는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 처분과 관련된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당장,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박현)는 지난 22일 태양광발전업체 A사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 2018년 7월 장흥군 산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가 '해당부지 인근 마을주민 전체 합의 및 수익금의 15% 이상을 마을 발전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증빙서류를 내라'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한 장흥군 처분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게 아니고, 사업자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B·C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장흥군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8개 사업자가 장흥군 임야 3만 9648㎡에 걸쳐 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 설치허가를 신청했다가 장흥군의 불허가 처분을 받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사업자와 지자체 뿐 아니라 주민들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영암지역 주민 20여명은 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반발, 개발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

송을 내 승소했다. 영암군이 지난 2018년 2월 설비용량 999.6kW, 99.9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에게 각각 1만3071㎡, 1579㎡의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토록 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로 인한 해당지역 및 인근의 환경오염 발생 우려, 자연경관 훼손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재량판단 없이 처분하는 등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어정쩡한 태도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갈등 상태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

나가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적극 개입·중재 꺼려서? 주민·사업자간 분쟁·민원 급증=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남지역 내 태양광민원은 지난 2월 기준으로 모두 414건에 이른다. 전남지역 주민들이 매년 100건 가까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20건(2016년)~51건(2017년) 수준이던 민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산하면서 지난 2018년 153건으로 폭증했다.

이후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2019년 109건, 2020년 81건 등 100건 안팎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줄을 잇고 있으며 태양광 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주민들 민원은 더 많아진다.

주민들은 자연경관 침해·산림훼손 등 환경 파괴(271건), 생활·건강권 침해(131건), 자가 하락 및 농작물 피해(84건), 홍수·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53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돌로 갈라지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해남 문내면 용암리의 경우 400MW 규모의 태

양광 설비 시설이 조성되는 데 따른 주민 의견이 돌로 쪼개지면서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멈춰선 상태다. 1485억원을 투입, 96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시설을 설치하려는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일대 도민발전소도 나아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자치단체가 어정쩡한 태도로 주민들과 사업자 간 분쟁과 갈등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중필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담당자는 "탄소중립 시대에 신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지향해야 하지만 자연 환경 훼손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해 관건"이라며 "사업자와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합리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합의를 찾는 합의기구나 센터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발대식 26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발대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원들이 인구정책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분증 위조해 비행기 타려던 고교생 적발

광주공항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고교생이 붙잡혔다. 타인 신분증 등으로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26일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를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혐의(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행사)로 A(17)군을 입건해 조

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위조한 공문서로 신분증을 대신해 비행기를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인터넷에서 구한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문

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가족으로부터 등분을 건네받아 오후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친형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6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들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신분증 도용, 위조 등이 들통 났다.

광주공항에서는 최근 1년 사이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례만 3건에 달하면서 공항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3월에는 20대 남성이 지인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구입, 광주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지난해 7월에도 20대 여성이 제주공항에서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시행 광주 해직자 5명 복직 신청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지역 5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복직할 길이 열렸다"면서 복구청 소속 해직 공무원 3명의 복직을 신청했다.

공무원노조는 나머지 해직자 2명에 대한 복직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정년이 남은 해직자에게 연금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광주에서는 해당 기간 내 5명의 노조 활동 공무원(북구 3명, 동구·서구 각 1명)이 해직됐다.

이들 중 정년이 지난 3명의 경우 복직되더라도 공직에 다시 설 수는 없지만 감액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정년이 남은 광주 북구청 소속 2명은 공직에 설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가능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검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처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 신분 절차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약 1%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따라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피의자 신분 참여·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로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연합뉴스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리고 앉아 지나온 일들을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와 에세이.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